



제16대 국회개원에 바란다 양계농가 소외됨 없는 의정 기대

2000년부터 향후 4년간 우리나라 실립을 맡을 제16대 국회가 곧 개원하게 된다. 의정활동은 각 위원회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하겠지만 그간 부가 가치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관심 밖에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였던 농축산업에 새로운 시각과 안목을 가지고 접근해 주었으면 한다.

특히 양계산업은 축산업 중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농가수가 적다는 구실로 방치되 다시피 하였다. 결과적으로 유통구조는 원시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가격안정을 위한 토대가 부족하여 등락이 거듭될수록 생산기반은 침식당

하고 있는 실정임을 짚어주기 바란다.

이미 우리 양계농가들은 타 축산분야와 연계하여 자조금 납부 의무규정 입법화를 관철시키기 위해 행정부는 물론 입법부에까지 요구한 바 있으며, 지난 15대 국회에서 각 정당간에 합의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에 상정조차 하지 못한 실례가 있다.

나라 실립을 알아서 해아려 달라고 국회의원을 뽑아 대표성을 가지게 하고 있는데, 알아서 하기는 커녕 선진화된 제도를 구축해 보자고 관련업계에서 낸 청원입법까지 묵살해 버리는 구태의연한 일은 제16대 국회 회기 중에는 없길 바란다.

새로운 이상과 삶의 성취욕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함께 현실에 맞는 제도정비에도 심혈을 기울여 양계인은 물론 모든 국민이 공존공생

할 수 있는 기틀을 모색해 주었으면 한다.

양계산업이 자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양계인들이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도 많지만 근본적으로 제도보완을 통하여 이루어 나가야 할 일 또한 많다고 보여진다. 각종 세제정비는 말할 나위도 없고 먹거리 산업이라는 차원에서 제도적인 뒷받침이 효율적으로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시대는 변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제도에 얹매여 오히려 양계산업을 옥죄는 농지전용, 계사건축, 환경규제, 유통기준, 영농조합법인 육성 등 수많은 제도들이 이번 16대 국회에서 반드시 정비 내지 보완되어야 할 것이고, 마사회 농림부 이관 등과 같은 축산업계의 숙원사항도 원칙대로 검토하여 본연의 위치를 찾을 수 있게끔 배려가 있었으면 한다.

이 같은 차원에서 양계인들은 제16대 국회 의정 활동에 거는 기대가 그 어느 때 보다 크다 할 수 있다.

양계산물 가격안정대책 수립 시장기능에 맡기기엔 시기상조

아무리 양계산물 총 생산액이 요즈음 잘 나가는 국내 인터넷 기업의 총 주식 시가보다 적다고는 하지만 국민 식량 안보 차원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양계산업의 보호·육성을 전제로 가격안정대책 수립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설자동화 이후 양계인들의 생각은 두가지로 구분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가격안정과 관련하여 완전시장경제원리에 맡겨 두자는 원칙을 고수하자고 주장하는 측과, 공존공생의 차원에서 인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수급을

조절하자는 견해이다.

어느 주장이 바람직하나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현재의 여건과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안목에서 평가가 되어야 할 일이므로 단편적인 시각으로 결론을 도출할 시안이 아니라고 보여진다.

다만 유통구조나 생산기반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양계산물을 완전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보여진다. 대다수의 양계농가들이 수입개방과 관련하여 생산비 절감이란 절대절명의 과제를 놓고 정부 시책에 따라 막대한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였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상황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므로 자율경쟁으로 유도할 경우 도산하는 농가들이 무더기로 속출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선진 외국과 같이 자율적인 투자를 전제로 하였다면 경영기술과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가격안정을 유도하여도 큰 무리는 없겠지만, 어찌보면 우리나라의 양계산업 생산기반은 환경이 매우 특이하고 여건이 달라 신중히 생각해야 함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제조업으로 친다면 국민기업인 셈이다. 이점을 참고로 하여 양계인들은 과도한 증산을 자제하여 국내 수급안정에 역점을 둘 의무가 있으며, 정부는 양계업과 관련된 사회간접시설 확충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생산시설에 직접 투자하여 수혜의 형평성이 도마위에 오르는 것보다 유통이나 생산물의 안전성 확보에 투자하여 의욕있고 기술이 있는 양계인들이 양계산업의 주체가 되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해야 한다. 1990년대 접어들어 업계의 의견이나 장기적인 양계산물 가격 및 생산안정대책이 조율되지 않고 시장개방 대비를 위한 단기적인 대응 결정이 채 10년도 넘지

못해 국제경쟁력 향상 보다는 생산과잉이란 한계에 부딪치게 된 사실을 모두가 주목했으면 한다.

지금까지는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해 아우성치는 양계인들을 위해 직접 생산기반에 투자를 했다면 앞으로는 유통구조개선에 보다 과감한 투자를 하여 가격안정을 이를 수 있도록 생산자는 물론 정부, 관련산업체까지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닭 질병예방 대책수립 시급 안전성 확보가 경쟁력 좌우

대가축 분야의 구제역 발생 사건을 보면서 양계 산업이 이제부터 생산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방향제시를 해주고 있다. 닭과는 무관한 질병이기 때문에 그저 남의 일로만 치부할 수도 없는 것은 닭 또한 발생하면 재해에 가까운 질병들이 대단히 많기 때문이다.

양계산업이 수출이 가능한 산물생산 수준에까지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어찌보면 안전성에 대한 강조를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다. 양계산업에도 가금인플루엔자 의 발생이 몇 년전부터 시작되어 업계를 긴장시킨 바 있어 늘 불안한 입장이다. 방역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양계인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어 대대적인 발생이 있을 시 양계업계에 미칠 파장이 걱정되고 있다.

그 외에도 뉴캐슬, 가금티푸스, 감보로 등 후진 국형 질병들이 퇴치되지 못하고 있어 이들 질병이 계속 발생하는 한 수출은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닭질병 예방을 위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주축이 되어 최선을 다하고는 있으나 한 국가기관이 모든 닭질병 예방을 위해 뛴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여진다. 국가기관과 민간단체 또는 개별농가들이 합심하여 질병예방에 대처하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미미하게 마련이다.

우선 닭질병 예방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체계를 확립해 주는 일이 급선무가 아닌가 보여진다. 즉 생산자 단체나, 대학연구기관 등을 활성화 하여 연결고리를 갖게 하는 것이다.

민간단체가 앞장설 수 있도록 정책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고 민간 단체가 이행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가가 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역할 분담이 효율적이란 생각이다.

질병에 대처하는 것은 행정과 행동이 같이 병행되어야 한다. 농가들이 특정 질병 때문에 아우성을 쳐도 국가기관에 검사의뢰가 되는 건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는 의미를 상실하게 마련이고 결국에 가서는 행정과 행동이 서로 방향을 달리하여 질병 방역에 합일점을 찾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 농가는 정부에 책임을 밀고, 정부는 발생 건수가 적어 안심하는 일이 되풀이 되면서 정작 발생되어서는 안될 질병이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양계협회에 닭 위생방역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차후 닭 질병박멸대책본부를 발족시키기로 합의하고 기금모금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나섰다. 명분도 있어야 하고 효과도 있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민관 협동으로 닭 질병이 예방되도록 각자가 긍정적인 시각에서 도우려는 마음을 가졌으면 한다. **양계**